

■정부 종교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허용 논란 확산

“소수 인권보호 환영” “병역기피 명분 제공”

贊
反

정부가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안보·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찬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문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허용 권고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 반대 목소리를 내는 등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 중 하나였다.

양심과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문제는 단순히 소수 인권보호 차원을 넘어 병역형평성 및 합법적인 병역기피 논란 등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각에서는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병역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보수단체인 재향군인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체복무 허용은 기회주의적 진병거부자들에게 병역 기피의 명분을 제공해 주는 위험한

발상으로 국가안보에 해를 입히고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게 된다”고 주장했다.

향군은 이어 “남북 분단상황에서 종교적 또는 양심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자에 대한 대체복무 허용은 시기상조”라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상훈 전 국방장관도 “대체복무를 허용할 경우 이를 요구하는 종교단체가 많아질 것”이라며 “복무기간 단축과 연합사 해체, 북방한계선(NLL) 협의의 가능성 등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참여정부에서 너무 많은 일을 벌이고 있다”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반면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총기를 들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법적, 사회적 처벌을 받아왔던 병역거부자들에게 대체복무제를 허용하기로 한 정부의 결단을 환영한다”고 찬성입장을 표명했다.

인터넷에서도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아이디 ‘dbsrms82’란 네티즌은 “종교적 신념이 잘못됐다고 할지라도 그를 모두를 전과자로

만드는 것은 절대 안된다”며 “국가차원에서 일반인이 기피하는 고강도 사회봉사 분야에, 그것도 일반병보다 급철이 많은 기간을 봉사하게 한다면 결국 이익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이디 ‘morgan44’는 “인권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진보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한다”며 “군대인권과 더불어 개선돼야 할 문제였는데 이번이 좋은 기회”라고 주장했다.

이런 논란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한센병원을 비롯한 사회복지시설에서 직접 환자 및 노인들의 수발을 드는 체제를 한 뒤 대체복무 허용 계획을 마련했다”면서 “형사처벌이라도 받겠다는 굳은 신념 없이는 일을 해내기 어려운 조건이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軍복무기간 단축안 국무회의 통과

현역병과 상근 예비역,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이 단축된다. 국방부는 18일 현역병 등의 군복무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노무현 대통령의 승인 절차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 복무기간 단축안을 승인하면 최종 확정된다.

이에 따라 육군과 해병대의 복무기간은 24

월에서 18개월로 줄어든다. 육군과 해병대는 작년 1월2일(2008년 1월1일 전역)~1월21일 입대자부터 하루 단축을 시작으로 매년 점진적으로 줄어다가 마지막으로 2014년 6월29일~7월12일 입대자에게는 179일의 단축 혜택이 주어진다. 2014년 7월13일 입대자(2016년 1월13일 전역)부터는 18개월을 복무하면 된다. 작전 및

의무전투경찰, 경비교도대 등의 복무기간도 육군, 해병대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 해군도 현행 26개월에서 20개월로 단축된다. 2005년 11월1일~11월21일 입대자부터 하루 단축을 시작으로 최종적으로 2014년 5월19일~6월1일 사이 입대자는 179일이 준다. 2014년 6월2일 입대자부터는 20개월을 복무하면 된다.

해양전투경찰과 의소방원 등의 복무기간도 해군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공군도 현행 27개월에서 21개월로 6개월이 줄어든다.

연합뉴스

DJ측 “각종說 명예훼손 책임 묻겠다”

17대 대통령 선거를 석달 남겨둔 가운데 김대중(DJ) 전 대통령측이 DJ와 관련된 각종 설(說)과 관련, 단호한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김 전 대통령측 최경환 공보비서관은 18일 “퇴임 이후 김 전 대통령에 대해 정치권에서 도를 넘는 막말을 하거나 일부 언론에서 사실무근의 주장이나 유언비어를 무책임하게 보도하는 일이 있었지만 무시해왔다”며 “하지만 앞으로 정치권이든 언론이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거나 명예훼손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고 민·형사상의 법적인 조치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최 비서관은 반박문에서 “2001년 국내 금융기관을 통해 비자금 3천억 원을 조성해 이를 대북송금용으로 썼다니, 비자금으로 유용했다니, 미국 뉴욕의 부동산을 구입했다고 보도했는데 모두 사실이 아니다”며 “국민의 정부는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시도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최 비서관은 “김홍일씨가 2001년 미국에서 돈가방을 수도 없이 날렸다고 했는데 홍일씨는 92년 이후 미국을 방문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 프로필 /

지방분권·균형발전 신봉자

성경 룡 청와대 정책실장

서울대와 미 스탠포드대에서 사회복지학, 행정학과 사회학을 전공한 학자 출신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002년 대선에서 승리하는 데 결정적 기여를 한 ‘행정수도 이전’ 공약의 이론적 틀을 제시한 책사.

참여정부의 3대 국정목표인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의 이론적 토대를 구축했으며,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신봉자로 알려져 있다.

특히 노 대통령 당선 직후 ‘노무현 정부 5년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가치를 공유하는 개혁 엘리트 1만명을 양성해야 한다’는 ‘개혁엘리트 1만 양병설’ 주장을 펼쳐 주목을 끈 바 있다. 부인 김양숙씨와 1남2녀.

▲경남 진주(53) ▲부산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미 스탠포드대 사회학 박사 ▲한림대 사회과학부 교수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위원 ▲대통령 자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장

연합뉴스

친환경 대운하 다각 검토

李 ‘한반도 대운하’ 손질 착수 “조령터널 안뚫고 우회로”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가 18일 남북원 공약인 ‘한반도 대운하’ 프로젝트에 대한 손질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대운하에 대한 찬반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는 가운데 본선 후보 근 한달 만인 이날 ‘문화정책 환경자문교수단’(단장 이화여대 박석순 교수)을 공식 발족시켜 대운하 공약 가다듬기에 나선 것.

환경전공 교수 총 107명으로 구성된 자문교수단은 앞으로 경부운하 한강분과 및 경부운하 낙동강분과, 호남운하, 금강운하 등 4개 분과로 나뉘어 친환경 대운하 건설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게 된다.

자문교수단은 우선 노선과 관련, 환경과 논란과 함께 자칫 대형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는 것으로 지적받고 있는 조령터널을 뚫지 않고 우회로를 택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박석순 단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강과 낙동강의 물길을 인공적으로 연결하는 조령터널



李 제주 수해복구 작업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후보와 나경원 대변인 등 당직자들이 18일 제주 삼도 등 동안두기 마을에서 수해복구 작업을 돕고 있다. /연합뉴스

(총연장 20.5km) 구간을 아예 제외하거나 터널 길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조령터널의 대안으로 속리산 협곡을 지나는 제3의 ‘스카이라인’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문교수단은 이와 함께 환경과 물길 수질오염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질개선 최우선 ▲4대강 및 주요 지천 습지 복원 ▲뱃길 주변 수변 생태계 유지 ▲간접취수 또는 취수원 이전을 통한 1급수 상수원 공급 등의 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자문교수단은 아울러 추석연휴 직후 당 소속 의원 및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운하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대운하 홍보전에도 주력키로 했다.

연합뉴스

문국현, 李 ‘용적률 완화’ 비판

범여권 ‘장외후보’인 문국현 전 유한킴벌리 사장은 18일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의 ‘용적률 완화’ 시사 발언에 언급, “한마디로 전형적인 개발만능주의적 발상”이라고 맹비판했다.

문 전 사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중소기업 중앙회관에서 가진 ‘문국현의 희망편지-사람이 희망이다’ 출판기념회 기념사를 통해 “인간에 대한 성찰이 없는 이명박식 시장 만능주의는 대한민국에 재앙을 가져올 것”이라며 같이 말했다.

그는 “배가 산으로 가는 운하를 만들겠다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선 안되며, 20세기식 토건국가적 국가경영으로 21세기 지식정보 사회를 이끌어갈 창조국가를 만들 수는 없다”며 “콘크리트나 땅값을 올리느라 ‘흔’이 빠진 가짜경제가 아닌 중소기업에 희망을 주는 ‘진짜경제’로 대한민국을 재창조하겠다”고 강조했다.

행사장에는 대한합민주신당 한명숙 원내총무, 제정길 영동연 신 명 김태홍 유선호 우재창 홍미영 등 의원 10여 명이 참석해 문 전 사장에 대한 관심을 반영했다.

연합뉴스



광주환경운동연합 등 광주·전남 19개 시민단체 회원들이 18일 오전 광주 YMCA에서 이명박 후보의 호남운하 건설 공약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리명주기자 mjna@kwangju.co.kr

환경단체 ‘한반도 대운하’ 반발

‘호남운하 대응연석회의’ 출범에서 ‘호남운하 대응 광주·전남연석회의’ 발족식을 갖고 호남운하 공약의 철회를 촉구했다.

시민단체들은 “호남운하 건설 공약은 지역민의 생명줄과 같은 영산강을 파괴하고 재정을 파탄시키는 것”이라며 “전국의 시민사회와 힘을 합쳐 호남운하 및 대운하 공약을 폐기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광주·목포환경운동연합과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YMCA, 영산강살리기운동본부 등 광주·전남지역 19개 시민단체는 18일 오전 광주YMCA

연합뉴스

광주·전남 이용가능성으로 대신프리모 남녀기발

확장 이전

가발

0.03mm 초슬립!!

9.1~9.30까지 세일 30%

이명박 당선 기념

귀여운 티셔츠를 인형을 좋아하는 영리한 딸방자가 되겠습니다

문의: 010-9952-5252, 010-9952-5253

100% 유기농이자민농업

장수출삼밥

자연 그대로... 우리밥에 좋은 유기농산물입니다

장수/삼/밥

010-522-5930